

광주·전남 의원들 ‘지역 챙기기’ 나섰다

소멸 위기 지역 지원·농축산 예산 증액·재난지역 복구 등
21대 첫 정기국회 맞아 법안 발의·예산 확보 분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1대 첫 정기국회를 맞아 지역 현안 법안을 발의하고, 지역 예산 챙기기에 나섰다.

이번 정기국회는 100일간 이어지며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21대 국회의원들의 경쟁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의원들은 앞다퉈 현안에 대한 법안과 건의를 내놓고 있다.

정기국회 개원 이틀째를 맞은 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소멸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단계로 본다. 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위험 지역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무안군, 나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여주시, 포천시, 충북 제천시 등이며, 이미 고흥군, 신안군과 경북 봉화군, 의성군, 청송군 등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국회에선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을 보면 총지출 규

모가 16조1424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555조8000억원 대비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 전체대비 3%대를 근근이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7년 만에 3%선마저 무너진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식량자급이 국가 안보 문제로 제기되고, 각종 자연재난과 기후위기,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폭적인 농업분야 재정지

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형석(광주 북구을)의원도 전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복구 예산의 신속한 지자체 교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재난복구 예산이 당 초 9월 3일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연이은 태풍 북상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어 각 지자체가 현재 자체 재원으로 긴급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하며 “지난 수해 피해 상황상 긴급복구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에게 정부의 재난복구 예산이 피해지역 지자체에 조속히 교부되어 피해지역의 원활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가

이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도 지난 1일 법사위에서 감사원장에게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부에 대해 이번 수해 원인인 방류량 조절 등 책임을 규명해줄 것을 감사 청구했다. 소 의원은 “수해가 발생한 다음날 순천을 찾아 직접 살펴본 현장은 실로 처참했으며 그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수자원공사는 수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보다는 실책을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뒷받침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노영민 비서실장 국회 출석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서훈 국가안보실장,노 실장.

/연합뉴스

민주 “더는 못 기다려 … 공수처법 개정”

통합당, 박 의장 요청에도 묵묵부답…민주 “개정방식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미래통합당이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자 결국 공수처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을 개정할 생각”이라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방식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

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문제는 개혁 입법의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결과를 지도부에서 잘 검토하고, 속도나 방식은 차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통합당에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통합당은 끝내 추천하지 않았다.

공수처장 후보를 선임하기 위한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에 더해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명의 추천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절차속(6명)을 채우려면 통합당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秋 이들의혹 수사로 밝혀질 것”
노영민 비서실장 운영위 출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서로 상이한 의견과 주장이 있다”며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작년 인사청문회 전에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증 과정에서 장관에 적격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입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통합당, 정강정책에 ‘5·18’ 명시

당명 ‘국민의힘’ 의결

미래통합당이 2일 ‘국민의 힘’으로 당명을 교체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정강 정책에 명시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명 변경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과 정강정책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당헌 개정에는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 ‘약자와의동행위’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당은 이날 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당명 변경신청을 했다.

이로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월 27일 취임 후 99일 만에 당의 간판을 바꾸고 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정강정책을 개정함으로써 쇄신의 첫 단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당명 변경은 2월17일 통합당 출범법 기준으로는 1981만이다.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라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이날 의결된 새 정강·정책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정강)과 10대 약속인 기본정책으로 구성됐다. 기본정책에는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명시됐다. 또 경제 민주화 구현, 국민 주거 안정 등이 포함됐고 새로운 노동형태의 대우행에 대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다만 초안에 담겼던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추진’ 조항과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합합 방안은 전날 비대위원회와 의총에서의 논의 끝에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홍구 “과거, 부족함 있었다”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인정

이홍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2005년에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2002~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느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현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근무 중인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사를 이용한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기준에 살던 아파트를 4억원에 팔고, 부인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새 아파트를 올해 1월 5억원에 샀다”며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8억 5000만원으로, 후보자는 7개월 만에 3억 5000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미 해운대 지역의 조정지역이 해제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살 집을 생각하면서 이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의원 복장 최소 규정 마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제안

최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 착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국회의 품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원 복장을 명확히 하는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 의정활동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달 초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데서 촉발된 의원 품위 논란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주요국 의회에서든 명문화된 복장 규정이 없었나 전례와 관행에서 벗어난 복장을 한 의원이 등원할 때마다 논란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의회가 공통적으로 ‘종교적 상징성, 상업적 광고, 정치적 견해’를 포함한 슬로건이나 복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 상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4.4%로 저금리 대출
-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대출(부담 100만원)
-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 군산·가례 등 고령산업 위기지역 분업 무담보·무이자 대출
- 3~9세 아동 65세 이상 저소득·단독주택 가구에 1%~2%로 저금리 대출
- 6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에 장학금 지급

▶문의: 1644-7990 (주요 24시간 상담)

평생 어부바

신협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지점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